

끝끝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만 옹호한 권익위, 부패 대변기관으로 전락한 ‘건희권익위원회’ 를 강력 규탄한다!

어제 저녁, 김건희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종결 처리에 대한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열렸고, 의결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의결서를 전격 공개한다며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행동이 담대한 결단이었고, 획기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권익위를 보고 있을 수많은 국민의 심정을 대변해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권익위는 오늘부로 ‘건희권익위원회’ 로 전락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직접 권익위가 부패 옹호 기관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어설픈 언론플레이 하나에 도취될 일도 아니며, 오히려 후안무치인 권익위를 만든 것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정무위원회 야3당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권익위를 향해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만일 권익위가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종결과 관련한 단순 내용으로만 의결서를 처리하도록 압박한다면 이를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로 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의결서에는 반대 위원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보론을 통해, 반대 위원들이 주장하는 요지만 간략하게 서술했으며, 그마저도 반대 요지를 부정하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이 아니며 제재할 수도 없다는 결론만 강조했을 뿐입니다.

이는 사실상 반대 위원들의 의견 반영을 묵살한 것이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경로를 따져보건대, 이는 정승윤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행위로 규정하기에 충분합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발표한 내용은 점입가경입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권익위의 종결 결정으로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의결서에는

‘공직자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공직자 자신과 제공자 사이의 직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면서, 디올백 제공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서술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권익위는 의결서에

설령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것이라 판단된다 해도,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이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디올백을 직무와 무관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노골적으로 인정해주면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를 옹호하는데,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수수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이보다 더한 궤변이 있을 순 없습니다.

또, 정승윤 부위원장은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피신고자 대면 소환 등의 조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법 제12조, 권익위 기능 중에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법 제29조에는 권익위가 기능 수행을 위해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권익위법도 제대로 독해할 줄 모릅니까?
아님 본인이 그렇게 우기면,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아놓고
어떻게 저런 뻔뻔한 변명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 권익위가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를 도왔다는 자백까지 했습니다.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결론이든지 선거 전에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고 이후 법률상 최대 처리 기한인 90일을 훌쩍 넘겨
6개월이 지나서야 종결 처리하더니, 그 이유를 선거를 의식해서였다고 대놓고
인증하는 권익위가 정말 제정신인 국가기관입니까?

지난주에 정무위원회 야3당은 권익위를 향해 권익위의 명예를 지킬
기회가 아직 있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이번 의결서를 매우 허술하고 일방적인 내용으로만 정리했고,
정승윤 부위원장은 노골적인 언론 플레이까지 감행함으로써
그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보내고 자폭을 택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정무위원회 야3당 위원들은 이제 권익위에 대한 기대를 접겠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를 향해 할 수 있는 행동과 요구를 가리지 않고 할 것입니다.

끝끝내 ‘건희권익위원회’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권익위를 강력 규탄하며,
오늘을 분노하고 있을 수많은 국민의 마음과 함께 저항하고,
윤석열 정부 권익위의 악행을 낱알이 역사에 기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07.09.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